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서 의지 밝혀 취약계층 ‘농산물 바우처’ 지원 확대도 지시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천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4월10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투표부터 본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

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지역·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원회법원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소외됐던 ‘40·50세대’ 맞춤형 공약도 발표

조국혁신당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못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제가 전국을 돌며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40·50대 맞춤형

공약인 ‘이중돌봄 세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중돌봄 세대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40·50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공약에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됐다”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민주, 온라인 여론 반영 공약 발표

불법주차 처벌 등 ‘7대 취약 저격’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불법 주차 처벌 강화와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해제, 불법 압포 근절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반영한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원 오창석씨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7대 취약 저격’ 발표 행사에서 “20·30·40대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제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오씨는 “일반 서민은 업무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 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갑자기 자리를 비워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 사례도 있다”며 “차량 견인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근거 통계법 22조 개정 ▲게임 프로모션(뒷광고) 규제 ▲인디 게임 지원 확대 ▲불법 압포 근절 ▲바다 치어 방류 확대 ▲교통비 50% 할인 국방 패스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사전에 정책위 단계의 점검을 거쳤다”며 “큰 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한해 오늘 발표했다. 법제화 문제도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 역대 최고치 경신

선관위 “큰 절차 변화 없어...참여 의지 높아진 영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5일 차 투표율이 56.0%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14만7천989명 중 총 8만2천915명(56.0%)이 재외선거 5일 차인 지난날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개 투표소에서 지난날 27일부터 이날 1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최종 투표율은 이날 오후 집계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재외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투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역대 총선 재외투표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였다.

선관위는 21대 총선 재외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투표 참여가 어렵고,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국가도 있어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투표율은 총선보다 높은 편이다. 역대 대선 재외투표 투표율은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 등이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프리즘

이개호 “저와 이석형 모두 세무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는 2일 “저와 무소속 이석형 후보, 양쪽 집안 친인척 모두 국제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이개호 후보는 “지난 5년간 한 번도 세금 제납이 없는데 이석형 후보가 3월 29일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현역 의원이 세금을 제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후보 측은 이날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을 이유로 영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석형 후보를 고발했다. 이개호 후보 측은 “양쪽 모두 세무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이윤석 “통합 목표시에 삼성반도체 유치”

무소속 이윤석 국회의원 후보(목포시)는 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2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목포·신안·무안을 통합해 광역화한 뒤 통합 목포시 먼 바다 해상에 군공항을 유치하고 친환경적인 지원금과 보상금으로 목포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군공항 이전발표를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목포 신재생에너지 특화

단지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 목표시에 삼성반도체와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 목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최적지인 통합 목포시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최고의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김성한 “원활한 교통 환경 구축”

무소속 김성한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는 2일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동남을 지역을 방문하는데 가장 불편한 이유로 주차장 부족, 교통 정체 등 심각한 교통 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된다”며 “특히 총장동, 동명동, 양림동 등의 주차 문제와 소태IC 같은 곳의 교통 정체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구청장 시절 대형 주차장의 확대나 신설을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를 한 바 있다”며 “상승 정체 문제를 도시 계획과 맞물린 도로 개선, 확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박선강기자

전진숙, 노인 세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는 2일 노인 세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최근 신체적 건강 나이가 높아지고 개별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도 높아짐에 따라 인생 이모작을 위한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참여 욕구가 높아진 60대의 활동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노인 세대를 위한 정책 공약

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어르신 종합복지공간육성 ▲인생 이모작센터 지원 ▲노인 벤처 일자리 지원 ▲간병 등 돌봄의 국가책임강화 등 4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복구의 밑거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기자

조인철 “떠났던 광주를 돌아오는 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후보(광주 서구)는 2일 “광주 국비 4조원 시대를 이뤄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났던 자녀 등 시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해 광주 인구의 순유출이 9천17명으로 지방소멸이 목전”이라며 “20대에서 70대까지 거의 모든 세대에서 유출이 일어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가 일자리를 찾아 광주

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경제 거점 도시로 우뚝 세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시민과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강기자

민형배 “에너지·AI 관련 기관 광주 유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후보(광주 광산)는 2일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 등 4대 정책 ‘1+1’ 공약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에너지·AI 산업 연계 국가 공공기관 광주 유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농 복수 주소제(Second Address) 도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및 광주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광양중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도 주목된다. ▲막거리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특별법 등 근거법 제정으로 지원 강화 ▲지역화폐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완화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약속했다. /김진수기자